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도의회, 제주·세종·전북과 '특별자치 완성' 협력 다짐	1
江原日報	02면	강원·제주·세종특별자치시도의회 특별법 대응 맞손	2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제주·세종·전북 등 시·도의회와 상생 협력 협...	3
연합뉴스	온라인	강원.제주.세종.전북 의회, 상생협력 협약 체결	3
G1방송	온라인	도의회-제주·세종·전북 시·도의회 상생 협약	3
춘천MBC	온라인	강원도의회, 세종·전북도의회와 상생 협력	4
강원도민일보	01면	20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	4
MBC강원영동	온라인	강원도 1인 가구 37%나 되는데, 관련 조례는 강원도와 속...	5
춘천MBC	온라인	도의회,'안전보건협의체' 임업재해 별도 논의	6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도민 급발진 의심사고 심리·법률상담 지원 나선다	7
강원도민일보	10면	독점골 백합나무 숲걷기 행사	7
강원도민일보	15면	홍천노인대학 졸업식	7
江原日報	16면	화천 국화전시회	8
江原日報	21면	“남궁억 선생 무궁화 독립정신 계승 한서학 탐구”	8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이무철(왼쪽) 도의회 경제산업위 부위원장·박찬흥 ...	9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박대현(화천) 도의원	9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최명서(왼쪽) 영월군수·윤길로(영월) 도의원	9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김기철(정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9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심오섭 도의원	9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0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부위원...	10
강원도민일보	01면	김진태 지사, 한·일지사회의 참석	11
강원도민일보	03면	김 지사 한·일지사회의 공통 현안 해결모색	11
江原日報	01면	산림·군사·환경 … 첩첩산중 '10대 규제' 걷어낸다	12
江原日報	02면	"빈대가 나타났다" 도내 방역 비상	12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날개 달았다	13
강원도민일보	03면	지역맞춤 특구 편성… 강원 발전상·미래먹거리 판도 바꾼다	14

강원도민일보	04면	강릉~제진 단선전철 제9공구 실시설계 승인 건설 속도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동해고속도 고성 연장 조기 관철을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지역정책 체감하는 변화 중요하다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선거구 '지각 획정', 만성화된 국회의 직무유기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도내 미분양 증가세, 주택시장 경기 회복 시급하다	18

2023년 11월 02일 (목)
강원도민일보
종합 02면

강원도의회, 제주·세종·전북과 '특별자치 완성' 협력 다짐

제주서 지방분권 의정박람회
헌법적 지위 확보 등 상생협약
토크콘서트 등 협력방안 모색

강원·제주·세종·전북 광역의회 의장단이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지방자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특별자치시·도 광역의회' 공통분모로 묶인 강원·제주·세종·전북 광역의회가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협력 등에 함께 나서기로 약속했다. 강원·제주·세종·전북 광역의회 간 첫 연대로, 특별자치시·도의회 간 협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북은 내년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라북도의회 등 4개 의회는 1일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한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서 의회 간 상생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자리엔 권혁열(강원)·김경학(제주)·이순열(세종)·국주영은(전북) 등 각 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특별자치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국세이양등 특별자치시·도의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별자치시·도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시·도의회 간 특별자치 역량 강화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등에 대해서도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의정박람회 축사에 나서 "특별자치 권한을 활용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찾는 소중한 자리인만큼,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주민의 관점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혁신하는 것이 야말로 특별자치시·도의 성장동력을 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협약식 이후 의회 간 협력방안을 찾는 토론회와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선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이 주제발표에 나섰고, 박용식 도의회 사무처장과 한동수·안신일·강태창 각 의회 의원이 토론을 했다. 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정선아리랑 공연을 비롯해 각 지역 대표단의 공연도 이어졌다. 박람회 2일차인 2일엔 제주신화월드에 방문해 특별자치 권한 활용 사례를 살필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11일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2012년 7월)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세번째 특별자치단체가 됐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지난해 7월 말, 본지 주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현지에서 첫 개최된 '대전환의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준비와 과제 모색 심포지엄'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교류를 시작했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년 11월 02일 (목)
종합 02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가 1일 제주에서 열린 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 참석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라북도의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강원·제주·세종특별자치시도의회 특별법 대응 맞손

제주서 지방분권 의정박람회 열려… 특별법 개정 협력 나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일 제주에서 열린 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 참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라북도의회와 협약하고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강원·제주·세종이 먼저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했고 전북이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협약은 특별자치시·도의회의 협력 체계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네 기관은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특별자치시·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협력한다. 또 특별자치시·도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으고 시·도의회 간 특별자치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정박람회에는 강원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 김기홍·한창수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 의장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분권 토크콘서트에서는 권혁열 의장이 지방소멸을 주제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협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려 박용식 강원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의회 분야 특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문화교류 콘서트에서 강원 대표로는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이 나서 정선아리랑을 선보였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규제의 혁신은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양받아 지역의 일은 지역이 책임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이뤄진다"며 "특별자치시·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 협약이 살기 좋은 특별자치시·도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KBS 춘천

2023년 11월 01일 (수)

강원

강원도의회, 제주·세종·전북 등 시·도의회와 상생 협력 협약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서 제주도의회, 세종시의회, 전북도의회와 함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서명한 각 의회는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된 협력, 특별법 개정을 위한 협력, 특별자치단체 의회의 전문성을 위한 협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박성은

연합뉴스

2023년 11월 01일 (수)

종합

강원.제주.세종.전북 의회, 상생협력 협약 체결

G1방송

2023년 11월 01일 (수)

강원

도의회-제주·세종·전북 시·도의회 상생 협약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라북도의회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특별 광역의회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협약 체결로 이들 기관은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응논리 개발, 의회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3년 11월 01일 (수)

강원

춘천MBC

강원도의회, 세종·전북도의회와 상생 협력

강원도의회가

세종시의회, 전라북도의회와

상생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과 세종,

전북도의회는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 대응에 협력하고,

시도의회 간 특별자치 역량 강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정 박람회에서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의회 분야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연합뉴스, 엔사이드 등 61개 언론사 보도

2023년 11월 02일 (목)

종합 01면

강원도민일보

20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

양양 오색리~설악산 끝청 3.3㎞
1172억원 투입 2025년 완공 목표

속보=41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본지 10월 17일자 1면)이 오는 20일 첫 삽을 뜬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은 20일 오후 2시 오색지구 하부 정류장에서 개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부처·관계기관장과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회 의장, 신경호 교육감, 이양수 국회의원 등 도출신 국회의원, 김진하 양양군수를 비롯한 도내 시·군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착공식에선 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축사, 테이프 커팅식 등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 대선 1호 공약이다. 역대 정부를 거치며 사업 추진과 보류, 재추진 등 적지 않은 부침을 겪어왔으나 지난 3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을 시작으로 8개월 만에 주요 행정절차를 끝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구간은 양양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해발 1430m)까지 3.3㎞이다. 완공 목표는 2025년이다. 총 사업비 1172억원(도비 224억·군비 948억)이 투입된다. 현재 양양군은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해 원가 산정 등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MBC 강원영동

2023년 11월 01일 (수)

강원

강원도 1인 가구 37%나 되는데, 관련 조례는 강원도와 속초만 마련

홍한표

강원도 내 1인 가구가 25만 세대를 넘으며
중요한 가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관련 조례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원미희 강원자치도의회 의원 발의로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지난 2021년 속초시가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강원도 내 1인 가구는 25만 4천 명으로
전체 가구의 37%에 이르고 있고,
강원도 인구로 대비하면 6명 중 1명 꼴인
17%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11월 01일 (수)

춘천MBC

강원

도의회,'안전보건협의체' 임업재해 별도 논의

강원도의회가

'강원지역 안전보건 협의체'에서

임업 현장의 안전 강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기영 도의원은

춘천MBC 임업재해 예방 기획보도를 계기로

매년 두 차례씩 열리는

'안전보건 협의체'에서

강원도에서 주로 발생하는

임업재해 분야를 따로 분리해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안전보건 협의체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강원도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이승연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2일 (목)
종합 02면

강원도민 급발진 의심사고 심리·법률상담 지원 나선다

분권K - 우리마을조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다.

김용래(강릉·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48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제6조)을 담고 있다. 또,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한 운전 요령,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교육하는 내용(제4조)도 담겼다. 필요한 경우, 강원도 공용차량에 가속장치 또는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제5조).

급발진 사고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 이은 두번째다.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 등을 담은 조례를 지난 7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강원도에선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의심사고로 운전자 할머니가 다치고 손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유족이 사고 입증 책임, 트라우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는 피해자 지원을 조례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었다.

김용래 의원은 1일 "사고 입증의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이상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가 사고를 당한 도민을 보살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는 3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7일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2일 (목)
지역 10면

독점골 백합나무 숲걷기 행사 춘천시 동면 감정1리 개발위원회가 주관한 독점골 백합나무 등 단지 숲걷기 행사가 1일 동면감정리 현지에서 강성원 동면감정1리 이장,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양숙희 도의원, 이동수 국립춘천숲체험원장, 임동일 춘천시 산림조합장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2일 (목)
지역 15면

홍천노인대학 졸업식 제42회 홍천노인대학 졸업식이 최근 축협 하나로마트 갈마로지점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이영욱 도의원, 최이경 군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江原日報
2023년 11월 02일 (목)
지역 16면

화천 국화전시회 화천국화연구회(회장:길연수)가 주관한 제27회 화천 국화전시회가 1일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 최명수 부군수, 노이업 군의장과 군의원, 박대현 도의원, 김종녀 화천교육장, 봉윤일 NH농협 군지부장, 이화영 화천문화원장, 이봉은 화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오흥선 간동농협 조합장, 최희석 군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11월 02일 (목)
인물 21면

"남궁억 선생 무궁화 독립정신 계승 한서학 탐구"

본보·홍천군·강원한국학연구원 주최·주관 한서대상 시상식
김국우 한서남궁억선생기념사업회 학술연구원장 대상 영예

제7회 한서대상 시상식이 1일 홍천문화예술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홍천군, 강원일보, 강원한국학연구원 등이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영예의 대상은 김국우 (사)한서남궁억선생기념사업회 학술연구원장이 수상했다.

김국우 원장은 '3·1혁명 100년사', '위대한 나라꽃 무궁화' 등의 발간을 비롯해 무궁화 법제화 기획, 무궁화 보급 등에 앞장서 왔다. 한서남궁억선생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사)삼일독립운동100주년기념사업회 이사장, 건국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원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적으로 영광"이라며 "앞으로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 독립정신과 교육철학사상을 토대로 한서학으로 독립한 학문체계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강원학과 강원문화와의 연관성을 찾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주어졌다.

◇제7회 한서대상 시상식이 1일 홍천문화예술회관 2층 강당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 강원자치도의원, 용준식·이광재·황경화 군의원, 박주선 강원자치도문화원연합회장, 이인영 강일언론인회장,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홍천=박승선기자

한서대상은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가·교육자·언론인으로 활동한 한서 남궁억(南宮檍·1863~1939년)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강원일보와 홍천군이 2017년부터 제정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홍천의 대표 위인인 한서 남궁억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많은 분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군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면서 "홍천학심포지엄은 홍천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 강원자치도의원, 용준식·이광재·황경화 홍천군의원, 박주선 강원자치도문화원연합회장, 이인영 강일언론인회장,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 민병하 홍천농고 교장, 허영철 알파카월드 대표, 이영복 홍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 백금산 한국예총 홍천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천=하위윤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2일 (목)

인물동정 10면

이무철(왼쪽) 도의회 경제산업위 부위원장·박찬흥 도의원은 2일 오후 2시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리는 2023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2일 (목)

인물동정 18면

박대현(화천) 도의원은 2일 오후 2시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리는 2023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2일 (목)

인물동정 16면

최명서(왼쪽) 영월군수·윤길로(영월) 도의원은 2일 오후 4시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열리는 영월군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2일 (목)

인물동정 12면

치행정학과 청학제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2일 (목)

인물동정 16면

김기철(정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2일 오후 2시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리는 제1회 강원특자도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한다.

심오섭 도의원은 2일 오전 10시 강릉원주대에서 열리는 강릉원주대자

江原日報

2023년 11월 01일 (수)

종합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길로(영월) 도의원은 2일 오후 4시 영월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41회 영월군민의 날 기념행사 및 군민대상 시상식에 참석.

김기철(정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이무철(춘천) 경제산업부위원장, 박대현(화천).박찬흥(춘천7) 도의원은 2일 오후 2시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리는 2023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대회에 참석.

이승진(비례) 도의원은 2일 오전 10시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춘천시농민한우기 게이트볼대회 개회식에 참석.

심오섭(강릉) 도의회 사회문화부위원장은 2일 오전 10시 강릉원주대 강릉캠퍼스 산학협력관203호에서 열리는 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청학제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11월 01일 (수)

사회

[동정]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부위원장

심오섭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부위원장은 2일 오전 10시 강릉원주대강릉캠퍼스에서 열리는 자치행정학과 청학제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2일 (목)
종합 01면

김진태 지사, 한·일지사회의 참석 제7회 한·일지사회의가 1일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경북, 인천, 세종, 전북 5개 단체장과 일본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현 전국지사회장 지자체)을 비롯한 도치기, 야마나시, 시즈오카, 시가, 돗토리, 오카야마, 히로시마현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기사 3면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2일 (목)
종합 03면

김 지사 한·일지사회의 공통 현안 해결모색

내일 토야마현 교류 30돌 행사 참석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인천, 전북, 세종 시도지사들이 1일 일본야마나시현에서 개최된 '제7회 한·일지사회의'에 참석해 양국 지방정부의 공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이 지사와 일본 전국지사회장 (돗토리현 히라이 신지 지사)이 만나 한·일지사회의 개최를 전격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한·일 양국 지방정부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6년 만에 재개된 한·일지사회의에는 한국에선 경북, 인천, 세종, 강원, 전북의 5개 단체장이, 일본에선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현 전국지사회장 지자체)을 비롯해 도치기, 야마나시, 시즈오카, 시가, 돗토리, 오카야마, 히로시마현 지사와 나가노, 교토, 후쿠오카 부지사 등 11개 단체장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양측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이날 야마나시현 음악과 숲의 미술관 오르관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지방창생·균형발전'을 주제로 한일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각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당면 현안 사항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 한·일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2025년 한·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제8회 한일지사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김 지사 등 한국 광역단체장들은 2일에는 윤석민 주일한국대사와 오찬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타케다 료타 간사장 등과의 면담이 계획됐다.

김 지사는 오는 3일, 토야마현 우호교류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 지방정부 간 협정을 갱신 체결한다.

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도 특산물, 한국 문화 등도 홍보할 예정이다. 김덕형 duckbro@kado.net

江原日報
2023년 11월 02일 (목)
종합 01면

산림·군사·환경 … 첩첩산중 '10대 규제' 걷어낸다

'道 특별자치 저해 규제' 선정 내년부터 완화 추진

6중 규제 축구장 1,330여개 규모…5중 규제도 129㎢

강원도 내 총 규제 면적 전체 행정구역의 '145%' 달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6중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9.5㎢, 5중 규제 지역은 12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중 규제 지역은 속초시 면적을 웃돌 정도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특별자치 저해 10대 규제'를 선정해 내년부터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강원지역에서 6중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인제군 설악산 일원, 태백시 태백산 일원, 평창군 월정사 일원 3곳으로 면적은 9.5㎢가량이다. 축구장 1,330여개와 맞먹는 크기다. 주요 규제는 산지관리법(보전산지), 산림보호법(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법(핵심구역), 자연공원법(국립공원구역), 수도법(공장설립승인지역), 문화재보호법(지정문화재) 등이다.

5중 규제 지역은 129㎢로 속초시 전체 면적(105㎢) 보다 넓고 동해시 면적(180㎢)보다는 다소 작다. 특히 접경지와 주민 생활권 지역에 집중됐다. 대표적 5중 규제 지역은 원주 부론면 일원으로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부론면 일원에는 4중, 3중 규제 지역도 혼재돼 있다. 부론면은 강원자치도와 원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에서 규제 완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접경지에도 5중 규제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양구 동면, 화천 화천읍, 화천 간동면의 일부 지역이 군사기지법과 한강수계법, 수도법 등의 5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강원자치도 총 규제 지역의 면적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 대비 145%에 달한다.

도는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법, 군사기지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10대 규제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현장 점검 등을 거쳐 규제 완화에 본격 나선다. 국회,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법령 개정,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 등 다각도로 규제 해소를 모색할 방침이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강원자치도 발전을 저해하는 토지 규제 등 핵심 규제를 찾아내 현장 점검, 전문가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규제 혁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11월 02일 (목)
종합 02면

"빈대가 나타났다" 도내 방역 비상

원주 A 회사 기숙사서 피해 신고 접수… 물림 사고 등 발생

道 18개 시·군에 대응 요령 안내·신고 사례 취합 방안 검토

최근 전국 공동 숙박시설 등에 빈대가 출몰하면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빈대 발생이 확인됐다.

1일 방역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원주에 있는 A사 기숙사에서 이불과 매트리스, 신발 등에서 빈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 방역 작업을 펼쳤다. 방역업체 관계자는 "빈대 신고는 이전부터 간혹 있었으나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전문 방역업체도 퇴치하기가 쉽지 않고 비용도 비싸 한번 빈대가 출몰할 경우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긴급 대응에 나섰다.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물릴 경우 잠을 설치게 되고 가려움과 피부 감염이 생기는 등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른 데다 박멸도 쉽지 않다.

강원특별자치도 방역당국은 지난달 30일 18개 시·군에 공문을 배포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또, 각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 사례를 취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빈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관리 대상이 아닌데다 구제 방법도 없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역당국은 빈대가 옷, 매트리스 등에 붙어 실내에 서식하거나 해외여행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 관찰과 방제를 당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 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외 여행 중 빈대 노출이 있을 경우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고 공동 숙박시설에서 빈대 흔적 등을 확인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70년대 DDT 살충제 도입 등으로 빈대가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등 외국에서 빈대가 급속히 퍼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빈대 출몰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박서화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2일 (목)
종합 01면

강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날개 달았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강원도 요구 현안 상당수 반영
강원특별법 특례 확대 추진
반도체·바이오헬스 육성안도
도내 거점 연결 순환철도망 기대

정부가 기회발전, 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비전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로드맵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3차 개정에 돌입한 미래산업 특례 발굴 등을 중심으로 한 강원특별법 특례 확대를 비롯 강원형 반도체 등 미래산업벨트 특화산업 육성,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완공과 삼척~영월 동서고속도로 착공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현안들의 해법 마련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5개년 단위로 짜여지는 이 계획은 이번이 첫 번째 계획으로, 중앙에서 마련해 지방으로 하달하는 방식이 아닌 지방이 중앙에 제시한 계획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짜여졌다. 도에서 요구한 각 현안들 상당수가 반영됐다.

이날 공개된 종합계획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는 '4+3 초광역권 특화발전 비전'을 밝힌 가운데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을,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눠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원권 주요 사업으로는 그린수소 저장·운송·충전 기기와 천연물 의약소재 상용화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 로드맵의 경우 '자치분권 선도'와 관련해선 첨단·해양산업, 첨단방위산업 등 미래산업 특례 발굴을 위한 강원특별법 특례 확대 추진과 자주재정 및 재정분권 등이 담겼다. 또, 도가 3차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국제학교 설립 등과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생물·생명자원 등 5대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안도 담겼다.

특히 강원형 교통망 완성으로 동서남북축 연결 고속도로, 수도권 1시간 대광역교통망, 도내 거점 연결 순환철도망이 반영됐다.

이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완공과 삼척~영월 동서고속도로 착공 등과 연계되면서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개막이 기대된다.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지방이 개별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맞춤형 자치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남궁창성·박지은

▶관련기사 3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2일 (목)
종합 03면

지역맞춤 특구 편성… 강원 발전상·미래먹거리 판도 바꾼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기업투자 수요바탕 입지 자율선정
공교육 발전전략 자율 수립·제안
내달 광역권 문화특구 13곳 지정
5년내 글로벌혁신특구 10곳 조성

정부가 1일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한 가운데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5대 특구 조성 및 유치가 될 전망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특구를 조성함으로써 시·도별 5년뒤 발전상과 미래 먹거리는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한 가운데 추진된다.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나 기존입지(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도의 경우 200만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를 결정한다. 정부는 각 시·도가 기업 유치와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지정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교육청, 대학, 향토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한다.

정부는 11월 중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된다.

문화특구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다.

기존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광역형 문화 선도도시'를 지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오는 12월 7개 권역별로 2곳 내외로 광역권 선도도시 총 1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도 조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1973년 대덕 연구학원도시를 시작으로 올해 도입 50주년을 맞았다. 기존의 광역 연구개발특구(5대)와 강소 연구개발특구(14개) 체제를 넘어 특별자치도와 기초 지자체 등의 새로운 수요를 담을 계획이다.

동시에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만든다. 지난 9월 공고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계획을 통해 연내 비(非)수도권 광역 지자체에 2개 이상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앞으로 특구 유치 및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단위의 치밀한 구상과 계획 수립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2일 (목)
종합 04면

강릉~제진 단선전철 제9공구 실시설계 승인 건설 속도

제진역 신설·편입용지 보상 등
송포리~사천리 구간 사업설명회
참가 주민 세부 간담회 요청도

강릉~제진 단선전철 제9공구(고성 거진읍 송포리~현내면 사천리 구간) 건설공사가 실시설계 승인과 함께 본격 추진된다.

국가철도공단은 1일 거진읍행정복지센터에서 시공사 관계자,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공단 관계자는 "남북철도와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결을 위한 교두보 확보로 남북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동해북부선 철도 공사가 진행된다"며 "제9공구 사업실시계획이 지난 31일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송포리~사천리 구간에는 화진포신호장과 제진역이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릉~제진 단선전철은 110.9㎞로 정거장 9곳(정거장 6곳, 신호장 3곳)으로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2조7418억원이다. 남강릉신호장에서 제진역까지 운행되는 기차는 EMU-260모델로 운행속도 250㎞/h, 운행시간은 56분이다.

강릉~제진 110.9㎞ 중 거진읍 송포리~현내면 사천리 제 9공구는 15.1㎞로 터널 2곳 9.4㎞(화포터널 448m, 산학터널 9026m), 교량 3곳 1.4㎞(자산천교 285m, 원당천교 50m, 현내교 1110m), 토공 4.2㎞다.

공단의 편입용지 보상 일정에 관한 설명이 끝난 후 질의 및 응답시간에는 지역 주민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송정리 주민 A씨는 "송정 마을은 토공 구간이 많아 조망권 훼손이 우려된다"며 "교량으로 설계변경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송정 뜰의 토공 높이는 7~9m로 설계는 안전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고 답했다. 원당리 주민 B씨는 "우리 마을에는 편입 토지가 많다"며 "세부 설명회나 간담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간담회를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편입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금액 산정은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감정평가된 금액의 평균값으로 정해진다"며 "이 경우 실거래가로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산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2일 (목)
사설/칼럼 19면

동해고속도 고성 연장 조기 관철을

-동해북부선·동서고속철 연계 산업 성장 기대

동해안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인 동해고속도로를 고성까지 조기에 연결해야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동해고속도로 개통이 속초에서 그쳐, 고성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습니다. 더구나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시도하는 고성에 고속도로 연장은 반드시 관철해야 할 현안입니다. 강원 도내 도로 교통망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미루지 말아야 할 숙제입니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월 속초~고성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지연돼 해를 넘기면 착공 시기가 불투명해집니다. 또한 건설 여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장 사업에 대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합니다.

조기 건설에 대한 기대는 고성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 연합회는 최근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10월 정기 회의를 열고, 조기 건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고성군은 매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등 교통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조기 건설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방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동해고속도로 미 연결구간 고성~속초 구간의 조속한 연장은 시대적 숙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가 속초에서 끊겨 고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속초요금소를 빠져나와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해야 고성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운행 차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청 소재지인 간성읍과 수산·관광 전진기지인 거진읍으로의 이동에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하게 펼쳐지는 고성 관광정책 효과도 반감한다는 분석입니다.

도로가 건설되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와 연계해 서울에서 고성까지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동해북부선 철도와 동서고속화철도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물류 교류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한다는 큰 그림을 목표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해 첫발을 디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 속도를 내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연내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할 사안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02일 (목)
사설/칼럼 19면

지역정책 체감하는 변화 중요하다

-지방시대계획 발표…실효보려면 이행 점검 분명해야

올해부터 5년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비전을 담은 실행계획이 나왔습니다. 11월 1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측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지방시대종합계획(2023~27년)을 발표하고 22개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5대 전략으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지방시대 핵심은 '교육과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이고 유자원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산업을 특화하도록 중앙에서 적극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을 소수의 클로컬대학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국립대 무상교육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장차 지역인재가 지역에 머물지 의문입니다. 특화발전 초점은 문화·관광 육성, 특성별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찍고있어 과연 이탈 청년층을 막을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17개 시도 및 중앙부처와 공동수립한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차질없는 추진이 중요합니다. 당장 2023년도부터 추진해야 할 계획이고 2024년도 국가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됐기에 더 빠른 시행으로 결실을 내야합니다. 일례로 강원의 경우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나, 현재 태백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는 해제 위기에 놓여있는 등 현실과 괴리된 경우는 철저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기능 분산책이 병행하지 않으면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4년 참여정부 때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 역대 정부를 거치며 지속해 왔지만, 근래 더 비대해진 수도권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총생산 격차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더 크게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100대 대기업의 90% 가까이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변화를 체감하려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비수도권 2차 이전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부처와 시·도의 지역정책과제 이행 정도를 세밀하게 점검 통제해 채찍질을 가해야 애써 만든 종합계획이 탁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江原日報
2023년 11월 02일 (목)
사설/칼럼 19면

선거구 '지각 획정', 만성화된 국회의 직무유기

내년 4·10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은 각 지역의 첨예한 이해와 갈등을 논리·타당적이고 객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한 룰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기본 정신이다. 역대 선거에서 항상 반복돼 왔듯이 내년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전국을 고르게 분할해 각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국회는 정쟁만 일삼다 시기를 놓치고 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6개월이나 넘겼는데도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될 선거 제도 개편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이 선거에 임박해 결정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의석수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헌법재판소가 시·군 일부를 떼어붙인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판단, '춘천 단독 분구'를 통해 9석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정치권의 노력도 위기를 맞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춘천과 함께 '누더기 선거구'가 됐던 전남 순천의 시민단체가 '선거구 쪼개기'로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3년 만인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현재의 기형적 선거구가 내년 총선에서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래서 커지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선거구 획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9석 배정과 춘천시의 자체 분구를 약속해 왔다. 때문에 강원인과 춘천시민 모두는 그것을 믿어 왔으며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믿음의 결과는 황당했다.

춘천시는 25개 읍·면·동 중에서 6개 읍·면·동을 인근 지역 철원, 화천, 양구지역에 나누어 주고 19개 읍·면·동으로 춘천 지역구를 구성하게 됐다. 분할된 지역의 인구수는 5만5,000여명으로 28만5,000여명의 춘천 인구 중 20% 정도를 내어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면적으로 보면 춘천시민들은 전체 춘천지역의 60%가 넘는 구역을 타 지역에 넘겨주게 됐다.

법정 시한 6개월 넘겼으나 합의 이루지 못해
춘천시 6개 읍·면·동, 인근지역으로 편입
인구 비례성·지역 대표성 동시에 담아내야

선거구 획정은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 면적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선거구가 정해져서는 안 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구가 그렇다. 농어촌 인구 감소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한 여야는 정작 20년 넘게 인구 문제를 외면한 채 각 당이 얻을 의석수에만 혈안이 됐다. 선거 때마다 여야 공히 "일단 이번 선거만 넘기고 보자", "우리 당이 가장 손해를 덜 보는 방안으로 가자"는 기류가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그 사이 지방의 지역구는 선거 때마다 쪼개고 붙이느라 누더기가 된 곳이 허다하다. 인구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江原日報
2023년 11월 02일 (목)
사설/칼럼 19면

도내 미분양 증가세, 주택시장 경기 회복 시급하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4,000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2020년 2월 4,168가구를 기록한 이후 3년7개월 만에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3,958가구로 전월보다 6.2%(230가구) 늘었다. 7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국적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을 비롯해 인천, 전남 등 3곳뿐이다. 도내 미분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계약을 하면 현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거나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등 고육지책까지 나오고 있다. 공사가 끝나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도내 516가구로 전월 대비 16가구 줄었지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분양 물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인상 등의 여파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기대심리는 소폭 살아나고 있으나 부동산 침체 국면 역시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미분양 주택 증가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高로 인한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부진이 주된 요인이다. 최근 정부의 전격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전국적인 미분양 물량은 줄었다고 하지만 도내의 경우 정작 부동산 거래는 급매물만 소화하는 제한적인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속될 때 기존의 주택 매각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시장 개입,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당분간 고금리가 계속될 공산이 큰 만큼 미분양 물량이 쉽게 해소되긴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는 더 증가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지역경제의 우환으로 또다시 부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견사 사업지가 집중된 도내 주택시장, 중소건설사 연쇄 부도 등 부동산시장 리스크는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늘어나면서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건설사들이 경영난에 빠지면 대출을 해준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정교하고도 미세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수행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